

기고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중단해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정부는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짝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논의에 앞서 민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라.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검증없이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BTO-rs, 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

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기간을 연장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주려는 관료를 처벌하라.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연장규정이 없다. 2016년 경실련이 입수한 교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최장 50년 규정(제11조 수익률·사용료의 결정)으로 기존사업의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해당 규정은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기존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그간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이다. 이들에게 특혜가 우러되는 정책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민자사업자 활성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사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시대흐름이다. 지방자치의 확대될수록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6월13일로 예정된 민선7기 지방선거를 통해 내고장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자임하는 예비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선진국 형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혜 모으기에 나서야겠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7월이면 지방의회 27년, 지방자치단체 23년을 맞는다.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연륜이 적지 않게 쌓였음에도 갈 길이 멀다. 과제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최근 우리 사회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체 작근을 위한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목할 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우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의 삶까지도 제대로 판단하는 게 긴요하다. 국가적 현안도 중요하지만 4년간 지방의 살림을 꾸려갈 지도자들을 뽑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체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끝에 56.8%까지 끌어올렸을 뿐이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대 대선 득표율 77.2%, 20대 총선 득표율 58.0%보다 낮다.

설상가상 6·13 지방선거는 자칫 정치혐오증을 불러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안희정 전 총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으로 패닉에 빠졌다. 그간 안희정 마케팅을 펼쳐온 친안희정계 인사들

전문성·도덕성 갖춘 지방선거 후보

간 논란의 이면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장 사이에선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도입한 복지업무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확대된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어떻기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하는 데 중앙과 지방, 정치권이 힘써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요청된다.

중요한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정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 관심이 절실하다. 그래서 후보들이 내세

은 물론 충청지역 여론 출마자들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더해민 추방을 향해 터지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언제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과거 한국당도 여당 시절 잇따른 성추문으로 야당의 비판 공세에 시달려 왔다.

유권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제대로 갖춘 인물을 골라야 한다. 내 손에 우리 지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육성을 가려야 하는 것이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중앙정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유력후보에 줄을 서는 행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선거 구태이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눈과 열정적 참여가 있어야겠다.

세계로컬신문 THE SEGYELOCAL SHINMUN www.segyelocalnews.com

• 발행인 : 박 귀 중 • 인쇄인 : 정 희 택 • 편집인 : 우 상 규 • 편집국장 : 김 정 태

• 대표전화 : (02)2000-1686 • 제보 : (02)2000-1684 • Fax : (02)2000-1680

• 주소 : 03175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희궁길 26 • 구독신청 및 광고 안내 ☎(02)2000-1686

• 구독료 : 월 10,000원 • 2016년 6월 2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450316

• Email : news@segyelocal.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OCAL 단상

'란도셀'에 허리가 휘다나...

6·25전쟁이 나던 해 봄 나는 서울 만리동에 있는 봉래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손기정 선수를 배출한 양정학교와 담하나 사인 이 학교는 1895년에 관립정동소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봉래국민학교로 개명됐다. 행정구역이 일본식인 봉래정(町)으로 바뀐 것이다.

청일전쟁에 출병할 일본군이 들어와 만리창(萬里倉)에 진을 치고, 제일 먼저 남대문 안에 들어가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신변에 불안을 느끼던 일본인들은 마치 '지옥에서 신선이 사는 봉래산으로 옮겨온 느낌'이라며 남대문 밖 마을을 '봉래'라고 이름 붙였다. 봉래산(蓬萊山)은 중국의 선인(仙人)들이 산다는 전설의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다.

나와 함께 그해 갓 입학한 조무래기들이 운동장에 일렬횡대로 줄을 늘어섰다. 초보였는데, 그때 사진을 보니 모두 반바지차림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완전히 왜정 때 식이다. 해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왜색은 그대로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 중에는 더러 각반(脚絆)을 맨 분도 있었다. 이윽고 성능이 좋지 않은 확성기에서 명령이 떨어진다. "일동 앞으로 나와 우선 가방을 집는다"

모두 몇 발짝 앞으로 나가 란도셀(등에 매는 일본식 어린이가방)을 집어 들고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이어 구령에 따라 앞에 놓인 필통, 주판같이 생긴 숫자놀이, 공책 등을 차례로 주워 가방에 담았다. 필통에는 연필 몇 자루와 석유냄새 풍기는 색색이 지우개 등이 들어있었다.



정명수 언론인

'란도세루(ランドセル)'는 일본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매는 책가방이다. 네모난 견봉같이 생긴 이 가방을 6년 동안 메고 다닌다. 란도세루는 네덜란드어 '란슬(Ransel)'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 어린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튜브 대용으로 쓸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뒤통에 달린 채 등에 매는 가방의 일종인 란도셀은 원래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막부가 서양식 군대제도를 도입할 때 장병들에게 지급한 배낭이었다. 네덜란드산 이 배낭을 일본식으로 읽어 '란도세루'로 변했고 우리도 덩달아 란도셀이라 부르지만, 우리말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속어다.

언제부터인가 군장(軍裝)이던 란도셀이 유치원 학생들의 통학용 가방으로 채택되면서부터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된다. 말로는 "교육 장소

에서의 평등"이지만 소위 다이쇼 덴노(大正天皇)의 로열학습원 입학 때 란도셀을 하사하면서부터 서서히 란도셀이 소학교용 '금수저' 가방으로 위세를 떨쳤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면 우리가 뭘 가방은 아니다.

처음엔 가죽제품이었으나 대량생산 되면서 인조피혁제품이 70%로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소와 말가죽의 고급화된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높고 색상도 검정색과 빨간색 두 가지만 있던 것이 최근엔 핑크색, 갈색, 녹색 등 20여 가지가 나와 어린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본 란도셀 가방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짜리부터 기능성과 디자인에 따라 최고 115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란도셀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게도 제법 나가 일본에선 초등학교 생들의 등골을 휘게 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다는 이 란도셀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수입산 가격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우리 학부모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초등학교 개학을 전후로 학부모들은 물론 손주와 조카를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층까지 가세하면서 일본에서 수입한 수십 만 원대의 '란도셀' 책가방이 온라인시장에 나와 있다.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했던 책가방이 정작 일본에선 한물가 어린 시절 추억의 상징인 인테리어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말이다.

※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의 동반자

세계로컬신문



(사)세계일보 조사위원회

세계일보 조사위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로컬신문은 사단법인 세계일보 조사위원회와
손 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